

# 與, 내주재보선 후보 등록...유튜브 통한 언택트 '국민면접'

### 오는 27~29일 후보 등록...내달 2일 '국민면접'

### 서울·부산시장 후보 면접 유튜브 통해 생중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4·7 재·보궐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심사를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첫 회의를 갖고 후보자 면접 방식 등을 확정했다.

오는 27~29일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서울·부산시장 후보 면접의 경우 내달 2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텔레민주'를 통해 '국민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수의 심사위원만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후보자의 공약 발표 등 면접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

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사전 질문을 취합할 예정이다.

홍정민 간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말하며 "광역단체장의 경우 언택트 면접 방식에 대해 2차 회의가 열리는 29일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첫 회의에 참석해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물론이고 19개 지역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며 "지역

다 특성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결과를 내야 하겠다. 엄정히 관리해 좋은 후보를 뽑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으로선 서울·부산은 물론 각 지역 주거, 환경, 복지, 교육 등 주민 생활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문제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것"이라며 "코로나 국면에서 경제적 불평등 못지않게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직접 관여돼 있지 않더라도 당과 후보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관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당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정책 능력과 전문성, 업무추진력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온라인 입당 실현으로 100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었던 스마트 정당답게 시민·당원과의 획기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국민 공천의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며 "오늘 함께한 위원들이 시민·당원 동지들과 함께 필승 카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후보 선정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관위원을 총 11명으로 김 의원을 포함해 부위원장을 맡은 전해숙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 정태호·권인숙·이상현·홍정민·이수진(비례) 의원,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포함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7 재보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 절반 가량은 여성 위원으로 구성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론조사분과(정

태호 위원장)와 면접준비분과(전혜숙 위원장) 등 소위원회도 구성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본경선 참여...플랫폼 개방해야"

### "무소속 후보 포함해 야권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을 향해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제1야당이 주도권을 갖고 야권 승리를 위한 게임메이커가 되어달라. 끼여야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이 개방형 경선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 저는 이 논의에서 결정된 어떤 제안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오픈 경선플랫폼에 참여하는 후보는 저뿐만 아니라, 무소속 후

보를 포함한 야권의 그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하자"며 "모든 후보들이 실무 논의의 결과와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비전과 정책 경쟁의 포지티브(positive) 선거를 지향하고, 누가 단일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단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앞장서서 뛰겠다고 대국민 서약을 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구체적인 경선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경선 방식을 제안하는 건 아니다.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 서류 심사도 PT(프레젠테이션)를 통해서 본경선에 참여할 후보들을 뽑는다고 알고 있다"며 "그래서 함께 본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권 단일화 플랫폼을 야권 전체로 개방해준다면, 그 관리는 국민의힘에서 전체 관리를 하더라도 저는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그래서 어떤 방식이라고 좋다고 한 것이다. 제가 제안을 드린 방식을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하라고 하는 등 야권 전체 플랫폼을 열어준다면 그것도 실무 단계에서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시기는 여

러 협상을 통해 방법이 나오면 그걸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정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이야기가 된 사안이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 저 안철수는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선거를 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은 아니다. 미국 민주당에서도 이미 실행하고 있다"며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도 모든 후보에게 문호를 개방해, 공화당 후보에 대항하는 필승 후보를 선출해 왔다. 국민의힘이 도입한 미국 경선에서의 1대1 토론 방식도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저를 위한 단일화를 하자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 만일 제가 선택받지 못하더라도 단일 후보의 당선을 돕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저 머리 속에는 오직 단일화를 통한 야권 승리, 그리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겠다는 한 가지 목표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이낙연 "文대통령, 尹 자세에 대한 주문으로 받아들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대의를 실현하는 데 검찰과 법무부가 함께 노력해달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의 자세에 대한 주문이 아닌가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최재형 감사원장 때리기 전에 계기인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서는 "정책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그것이 갖고 있는, 즉 정책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인을 감사원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방식이 필요하다'고 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사전위탁제도를 설명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믿는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에 공감을 표시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

적 참여로 이익공유제가 실현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의 생각과 일치한다"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만한 매력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기업들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을 빨리 준비해서 국민들께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이재명 "재난지원금,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지자체의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양극화를 초래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재난지원금은 재정이 아니라 필요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가난'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 중에 자체조달 재원이 얼마나일뿐 예산총액은 중앙정부 지원금(교부세 등)을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며 이렇

게 말했다. 이 지사는 "결국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